

제7차 지리과 교육과정의 체제개선 방안 : 토론요지

최 원 회*

제7차 지리과 교육과정의 체제개선에 관한 류재명교수의 방안은 '사회과 통합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체제의 모색' 및 '지리과 교육과정의 각론 개발 방안'의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본 토론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회과 통합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몇가지의 보충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이 통합의 여러 명분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이다. 즉,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사회 3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교과들의 통합이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킨다는 주장은 1980년대 중반이래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고교육이론들, 예를 들면 과정지향적 이론, 내용특수적 이론, 내용무관적 이론, 내용통합적 이론, 전략적 교수-학습이론, 구성주의적 이론, 신피아제이론, 총체적 자원 가설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학습자의 학령, 사고의 유형 및 수준 등에 따라서 교과들의 내용구성 체제가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 보편적이다.

둘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이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논리는 국민공통기본교육 체제를 정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선택과목을 대폭늘리고 필수교과목의 경감 등을 위해서 사회 3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교과들의 통합은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령이 저수준인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방법의 하나이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학령이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교과통합형태에서 교과분화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이론의 기초이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회 3과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여하한 명분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셋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이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논리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서 사회 3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과 통합논자들은 합리적 민주 시민교육을 위해서 사회 3과뿐만 아니라 국민윤리 교과도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크게는 교육과정의 총론적 목표의 하나로서 모든 교과에서 지향하는 것이고, 작게는 일반사회교과와 국민윤리교과의 교과목표의 하나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분과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사회교과와 국민윤리교과에서 독립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환경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분과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교과에서 독립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사회 3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부분 억지이다.

또한, 사회과 통합논자들은 기존의 사회 3과, 특히 고등학교 사회 3과가 사회과학적 지식의 주입에만 몰두하고, 시민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제하고, 사회과학의 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이 중요하므로, 시민교육을 위해서 사회 3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 탐구학습이론을 전제로 할 때, 학습자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구조의 학습을 통해서 논리탐구와 가치·태도 탐구를 동시에 하게 된다. 즉, 사회과학적 지식의 교육과 동시에 시민적 가치·태도가 함양되는 것이지, 양자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의 여부, 또는 양자의 이원적 구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과학교육 중심의 사회과교육이 시민교육중심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탐구학습이론에도 위배되고 있다.

한편, 사고교육이론에 의하면, 사고의 3요소는 지식, 조작(操作) 및 성향(性向)인데, 이것을 사회과 탐구학습의 요소에 대응시켜보면, 사회과학적 지식에 대한 논리탐구는 사고지식과 조작의 학습에 해당하고, 시민교육과 관련한 가치·태도탐구는 사고성향의 학습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3요소는 학습상황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의 여부를 가리거나, 개별적 접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고교육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사회과학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을 위해서 사회 3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넷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은 현대의 학문패러다임의 하나인 다학문적, 간학문적 혹은 학제적 접근의 추세에 따라서 전통적 분리사회과학이 지양되고, 통합사회과학이 지향되고 있으므로 사회 3과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사회과학적 접근은 대학원 수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중등학교 수준에선 불가능한 일임이 여러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피아제에 의해 제기된 이래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수-학습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론에 의하면, 교과내용의 통합은 교사차원이 아니라, 학습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서 지식구조 형태로 제시된 다양한 내용들을 인지화 메타인지로 구성된 인지구조에 의해서 해체·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내용들에 대한 학습자 고유의 의미구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전통

적인 전달주의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3과의 통합은 교수-학습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론에 배치되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여러 인지적 및 정의적 목표들, 예를 들면, 학습자의 사고력 내지 탐구력의 신장, 시민의식의 함양 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토론학습, 협동학습, 개별학습, 자율학습, 현장학습 등이 일상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수업방법의 획일성, 교육시설의 부족, 학교문화의 경직성 등 교육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해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효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교사와 학습자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사회 3과의 통합은 기초적인 교육여건을 어느정도 해결한 다음 고려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섯째,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은 지역, 학교, 교사의 지도(인내)하에 학습자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정관련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 수준에서의 통합은 그 대상이 반드시 사회 3과가 아닐 수도 있고, 보다 다양한 교과목들간의 통합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와 지구과학, 사회문화와 국민윤리 간의 통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특정교과목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과정일 경우, 하위수준의 교육과정운영은 원칙적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일곱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이 원용하고 있는 통합의 이론적 근거문헌들은 대부분이 외국, 주로 미국의 저학년에서의 사회과 통합에 관한 것들이거나, 일반사회교과의 통합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헌들에 제시되어 있는 통합의 이론들을 심지어 고등학교 사회 3과의 통합의 이론적 근거로 원용하고 있음은 적지 않은 문제이다.

현재 저학년에서의 사회 3과 통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일반사회교과는 서로 독립적인 정치학, 경제

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등이 모학문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 다양한 모학문들을 일반사회라는 교과 수준에서 통합하는 일은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저학년에서의 사회과 통합논리와 일반 사회교과의 내용통합논리를 고등학교 사회 3과의 통합논리로 원용하는 것은 오류이다.

여덟째, 사회과 통합논자들은 사회과의 발생국인 미국에서의 1980년대 중반이래의 최근 동향, 즉 사회과의 분리 내지 사회과 속에서의 지리교육의 강화 등에 관한 문헌은 아예 외면하고, 통합에 관한 문헌(그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통합이나 일반사회교과 자체의 통합에 관한 문헌)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사회교과는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America 2000의 5대필수 교과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사회과내에서의 지리교육의 강화가 NCSS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

아홉째, 교육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사회 3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3개의 지침서를 연차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중학교 사회과 교사연수교재」(문교부, 1992),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내용구성연구」(교육부, 1994) 및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내용구성연구」(교육부, 1995)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지침서들은 통합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심지어 문장 수준에서의 사회 3과의 내용통합의 사례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타당성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3과의 내용통합이 이루어진 교과서를 누가 쓸 것이며, 누가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가 수반된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 3과 관련 모학문 전공학자들과 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실, 다시 말해 길지 않은 기간에 집중적이고 관행적으로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 3과의 통합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중학교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개선을 거듭했지만, 현행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은 결국 사회 3과의 주요내용을 대단원 수준에서 합쳐놓은 유사통합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설사 통합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고

등학교 사회 3과의 통합에 앞서서 중학교 사회 3과의 통합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또한, 사회 3과의 통합은 일선교사들의 사회 3과 내 타교과 교수능력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교사들에 대한 평상시의 타교과 재교육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 3과의 통합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교육부는 현직 사회 3과 교사의 문제점은 이들에 대한 재교육연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15일 정도의 일반연수를 통하여 타교과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부는 실제로 지난 '92년과 '93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막대한 연수비용 지출에 비해서 그 효과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연수는 전적으로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이해와 정착을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나, 그 취지는 연수교사들은 물론 연수담당 교수들에 의해서도 잘 이해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3과의 통합이 정당하고 불가피하다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사재교육을 완수한 후에 통합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째, 사회과 통합작업이 그것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사회 3과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의 학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작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사실상 서너명의 일부 관련자들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3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관계자들의 주장을 교과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독단적 교과이기주의이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교과의 경우 선택과목수가 늘어나서 94년 교원임용고시 실시 이래 선발인원수가 급증하고 있고, 일선고등학교의 사회 3과의 교사구성이 역사교사중심에서 일사교사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민교육, 정치교육, 경제교육 및 법교육의 강화 등등 명분은 있지만, 제6차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부분은 결과적으로 일반사회교과를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열한째, 사회과의 통합논리가 정당하다면, 사회 3과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내용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과 통합논자들도 강력하게 주

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도 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사회과는 통합이라 지금까지 국사분야는 통합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학교 사회과는 유사통합에다가 국사가 제외되어 파행적 교육과정일 수 밖에 없다. 만약,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본래의 의도대로 중·고교 공히 국사를 포함한 사회 3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사가 기존대로 배제된 채로 통합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회과 통합논리는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열두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회 3과의 통합,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사회 3과의 통합은 한국지리와 한국사의 단독필수과목을 폐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90년대 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대학에서의 교양필수과목인 한국사나 국민윤리 교과목의 폐지 내지 선택과목화와 명칭변경,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 필수과목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교육개혁의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진보적인 인사들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과 통합은 교육

이론, 교육여건, 추진과정 등 어디를 보아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회과의 통합, 특히 고교 사회과의 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설사, 사회과 통합의 논리가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연구, 교과서개발, 시범적용, 현직교사재교육, 교사양성 등을 어느정도 완수한 후에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교육부가 고교 사회 3과의 통합을 강행했는데, 원안대로 하지 못하고, 현행 중학교 사회과의 체제로 국사를 배제한 채 유사통합을 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 토론자가 볼 때에는 중·고교 사회과 통합은 현재의 여건상 유사통합만이 가능하다.

이제, 지리학과 지리교육학에 관련된 모든 학회와 연구회들은 사회과 통합, 특히 고교 사회과 통합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기나라 지리교과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리교과는 국어, 국사, 국민윤리 등의 교과와 더불어서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널리 알려야 한다.